

과학기술인들을 신바람나게

어느 나라든 과학기술의 진작은 대통령이 챙겨야

藥效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훈장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바람나게 알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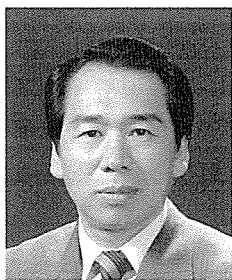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

특히 뛰어난 업적을 세운 과학기술인들을 기리기 위해

홍상 등 조형물을 세워주고 대학건물이나 거리이름도

저명한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붙여주어

과학기술인들의 의욕을 높여주었으면 한다.



宋 俸 鉉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부장/시인〉

해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지식은 물론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도구와 전략으로 선택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진흥, 대통령이 앞장서야

김대중대통령이 제13대 국회 경제 과학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과학기술 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도 과학기술에 관한 예리한 질문과 탄견을 제시한 것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감동스런 격려말씀이었다.

영국에서 비롯된 산업혁명은 한때 대영제국에 해지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었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주도국가로 부상하고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앞선 과학기술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처럼 낙후한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격상되었으니 문제의 실

마리를 푸는 것은 1차적으로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모색되어야겠지만 어느 나라든 과학기술의 진작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약효가 있음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드골대통령이 프랑스의 낙후된 기술을 만회하기 위하여 특정분야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개발에 전력투구한 결과 원자력, 해양, 항공기분야 등에서 선두그룹에 오른 후 오늘에 이르게 됐다. 구 소련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뒤 깜짝 놀란 미국은 케네디대통령과 존슨, 레이건, 부시대통령으로 이어져 우주개발을 진두 지휘, 지금은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와 앞서거나 뒤지거나 하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세우고 대덕연구단지 건설에 직접 나서서 등 열정을 쏟은 결과 과학기술 황무지에서 오늘의 수준만큼 이르게 하는데 성공했고 전두환대통령은 매 분기마다 과학기술진흥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반도체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부분적이거나 우리나라 반도체기술을 세계 금자탑위에 올려놓았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는 국가연구개발에는 시장원리가 잘 어울리지 않음을 짐작케 하며 국가수반이 실질적으로 챙겨야 상승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양대 축으로 흔히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제시한다. 그런데 1995년에 단행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는 과학기술영재 양성기관으로 잘 자라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뿌리를 파헤치는 우(愚)를 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다.

1 1998년 2월 25일에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번 취임식은 50년 정치사에 선거에 의하여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의미가 보태져 성숙해 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인 축제였다.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과학기술계는 지금 부흥기대에 차 있다. 지난 1월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하여 원고없이 한 연설을 통

과학기술훈장제도 도입을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경제전쟁의 주무기로 선택한다면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술을 담는 새 포대 하나로 과학기술훈장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시의에 적절하리라고 본다. 5백만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훈장제도 도입과 각종 과학기술상의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간헐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훈장제도는 구(舊) 총무처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았고 상의 확대는 호지부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정책도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마는 실상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에는 과학에 관한 훈장제도와 기술에 관한 훈장제도가 있음을 음미해 봐야하며 그동안 훈장이 많다는 사유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지가 약한 때문이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업적에 대한 훈장은 국민훈장이나 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이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새 대통령은 1년에 3~4회 이상 산업계를 포함한 범과학기술계가 참여하는 가칭 '과학기술혁신회의'를 주재하고 훈장이나 상을 직접 수여하면 세계시장 개척에 침병이 될 새로운 기술을 많이 창출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는 열한가지의 훈장 종류가 있고 훈장마다 각 5등급으로

구분되며 포장까지를 포함한다.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으로 훈장의 이름만 보아도 국가에서 고양시키고자 하는 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이중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은 1973년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어떤 제도이든 시대적 흐름을 유연성있게 반영하여 국정을 뒷받침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여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훈장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을 일으켜 세우는데 기폭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훈장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시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수훈(상)자의 선정과 수훈(상)사실을 해당분야 종사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훈장이나 체육훈장 수여, 수출의 날 행사 등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직접 시상과 격려를 하신 결과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는 과학기술훈장제도나 시상제도를 운영하는 데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예를 보아도 훈장의 수훈 자체가 영예로 여겨지도록 관련된 행사를 마련한다. 과학훈장과 기술훈장 수여에 정부와 의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다. 일본 역시 수훈 자체에 대한 영예를 높이도록 천황 임석하에 내각 총리대신이 훈장을 전

달한다. 수훈자는 부부동반으로 천황을 배알하게 하여 포상의 권위와 효과를 한껏 높인다. 일본은 훈장받은 자에게 매년 3백50만엔의 연금을 지급하는 특전이 추가되고 있다.

거리이름도 과학기술인 이름으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은 뒤 이름 남기기를 바란다. 우리 속담은 보통 지식인이면 누구나 기대하게 되는 명예추구의 심리를 예리하게 직시하고 있다. 훌륭한 과학기술인들이나 과학기술 최고 훈장 수훈자들의 흉상을 제작하여 공원 등 대중이 많은 곳이나 과학관 등에 설치하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의 과학기술훈장 받은 분이나 뛰어난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기리는 조형물을 세우면 어떻겠는가. 대학의 이공학건물이나 연구동에 출신학교 저명한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붙여주고 거리 이름에도 과학과 관련된 이름을 많이 붙여 부르면 과학기술인들과 과학기술에 꿈을 가진 청소년들의 의욕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숨페터가 창조적 파괴를 직시한 이후 이제는 생산의 삼요소에 지식을 추가하는 것이 경제이론으로 정착되었다. 인적요인이 단순 노동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창의로 작용하므로써 생산이나 제품의 질에 경이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의 역할 증대와 아울러 사명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공감한다면 과학기술정책의 첫번째 과제는 과학기술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닐까. ㉔